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호 (2024.01.26)

■ 이 슈

(경제)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호 (2024.01.26)

Cotents

I. 이 슈

(경제)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27년 35개교로 확대 운영 11

(투자) 16일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가능 11

(관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12

(기술) 과기정통부,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본격 추진 ... 12

(지역) 상습 물 부족 지역 대상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확대 추진 13

(경제) 정부, 재정 65%의 상반기 내 신속 집행을 위한 계획 논의 13

(교통)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가능한 'K-패스' 5월부터 시행 14

(물류) 해수부, 섬 지역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40만 원 한도 지원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류동훈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제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2024년 정부 정책 #경제·산업 분야 #인천시정

- 새해를 맞아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을 담은 ‘2024 정책 방향’을 발표
- 정부는 2024년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개선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및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2% 수준으로 전망
 - 이에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잠재적인 리스크관리에 주의하면서 국내 경제의 역동성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4)

[그림 1] 2024년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

- 정부에서는 가계·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소상공인·취약계층 △내수·수출 △지역경제·건설투자 등 부문별 지원책을 마련¹⁾²⁾
- (물가·서민)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의료·금융·납세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소상공인·취약계층) 소상공인 응원 패키지와 함께 세제·재기·교육 지원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및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추진
 - (내수·수출)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을 유도함과 동시에, ①무역 금융·수주 지원·통상협력 확대 ②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③외국인 투자 유치 및 유턴 촉진을 통해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 반등을 지원
 - (지역경제·건설투자)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의 육성과 인구감소 지역의 부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투자여건 개선 등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표 1] 민생경제 회복 대상 부문별 세부 지원책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물가 ·서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 10.8조 원 지원 및 과일 30만 톤(상반기) 신속 지원 • '24년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및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개선 • 생활 밀접 정보 공개 의무화, 전파 사용·에너지 가격 등 서민생활 관련 제도 상반기 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의료)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면제 기준 완화 △(금융)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서비스 강화 △(납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금액 인상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다가구 지원 및 공공임대 확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관리 강화 • 전세대출 및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
소상공인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1/4분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저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자 기준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 지원 • 교육, 컨설팅, 조세 경감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재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장애인 1:1 돌봄체계,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대 집행 • '24년 상반기 내 중장년의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안보 및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복지 확대 지원(4조 8,914억 원) △업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 및 통상 강국 도약 지원(1조 658억 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 주력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5조 2,8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국내 경제·산업의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3.12).
- 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증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 강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01).

내수·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소비(노후차·고효율기기 교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여행가는 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여행 서비스 확대 등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금융 공급,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수출 지원기업의 애로 해소와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경제외교 성과의 내재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EDCF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저변 확대
지역경제·건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의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및 금융 지원 강화 유턴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24.3)’ 및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 등 각 특구 권역별 거점 육성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통한 정주민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공공투자,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제고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설사업 관련 일부 규제 한시적 유예, 미분양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건설투자 여건 개선 공공부문 주택 공급 가속화 및 민간부문 규제·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4.01) 참고 및 재구성

○ 또한 대내·외적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①부동산 PF 연착륙 ②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③공급망 안정 확보 ④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

- (PF시장) 건설업계 발생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PF시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과 업체별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
 - 건설사 및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 △비주택 PF 보증 신설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 PF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여 부실(우려)사업장에 대해 LH 매입 또는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 및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요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가계부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따른 양적 관리를 통해 안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고정금리 대출 비율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
 -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양적 관리를 시행하며,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
 - 시중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요인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하여 관리
- (공급망)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위험 대응 기관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자원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강화 추진
 -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세액 공제 도입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다양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 (금융)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 연장(~'24년 상반기), P-CBO 신규 공급 확대, 국제통합계좌 개통('24.6월), 공매도 제도개선 등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및 안정화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및 한계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맞춤형 지원을 시행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4)

[그림 2] 금융기관 및 한계기업 건전성 관리 방안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계 및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4년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을 연속 발표할 예정
- (혁신 생태계) 과감한 규제 완화,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R&D 혁신, 벤처·창업·중소기업 생태계 고도화,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공정한 기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및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및 불공정 관행·제도 혁파
 - (사회 이동성)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확대

[표 2] 부문별 역동경제 구현 방안

구분		주요 내용
혁신 생태계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완화·개선하여 토지 이용 활성화 접경지 입지·인증·조달·유전자활용·환경 등 10대 분야 중심 길러규제 발굴·개선 첨단산업 육성, R&D 제도, 중소·벤처·창업기업 관련 제도 다방면 개선
	첨단산업 육성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분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적용 확대 및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가속화
	R&D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 및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공공의 글로벌 R&D 투자 및 민간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

	벤처·창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24년 하반기) 및 중소기업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24.7)하고, 모태펀드 활성화 및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생태계 고도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개선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 기반을 조성 •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공정한 기회	역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진입장벽, 영업규제, 신산업 제품·서비스 출시 절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불법사금융 등 시장 참여자의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공정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이중구조 개선대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②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③근로시간 제도 개편 ④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 및 투명성 강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보상 체계 설계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 상생협력 및 ESG 확산, 사회공헌 참여 유도과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사회 이동성	경제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박람회, 취업 서류 인정기간 연장,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유망분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청년과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확대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영재교육·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실업급여 개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필요경비 인정 △위기 가구 발굴시스템 정확도 고도화 등을 통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및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취·창업지원 강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4.01) 참고 및 재구성

○ 지속가능한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①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②인구·기후 위기 대응 ③미래세대 기회 확대를 목표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4년 내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

- (재정)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
- (인구) 인구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하게 전면 개편하고, 정책·인식 개선 촉진을 통한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
- (기후) 에너지 탈탄소화 및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를 확대·실시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녹색금융·배출권 거래제도·탄소포인트 등 기후대응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
- (기회) 청년세대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과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운용하고, 가족돌봄·마음돌봄 등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하여 안정성 증대

- 2024년 국내 경제정책은 ①민생부문 회복 ②대내외 리스크요인 관리 ③구조적 개혁 ④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인천시 역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의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또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취·창업 인센티브 △공공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인천시의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행에 참고
 - **(혁신생태계)** 반도체·바이오 등 인천의 중점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을 지역 산업 발전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천시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과 관련한 소부장 특화단지 등 정부 사업을 이용한 전략적 기회 포착이 중요
 - **(기후위기 대응)** 인천시는 현재 △녹색금융(GCF) △에너지 전환·믹스(Mix)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신규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등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³⁾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전환 정책과 발맞춤으로써 지역 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래세대 동행)** 정부에서 미래세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심리상담·가족돌봄 등 생활지원 서비스 △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 △취업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인천시의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⁴⁾
 - 이처럼 인천시의 2024년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유사 분야 정책 기조(방향성)를 참고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도전(참여)을 통해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 인천시의 정책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인천시는 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검토를 위해 '24년 하반기 중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

4) 인천광역시(2023.12)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9년 이후 전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청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제291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기일보(2023.11) 및 뉴스통신(2023.11)의 기사에 따르면 '23년도 인천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 한편, 2024년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2,793백만 원(40.3%) 감소한 18,978백만 원 수준(인천광역시, 2023.12)

제조 >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15.9% 증가한 110.3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⁵⁾
 - △PC·모바일·서버 등 IT 기기의 재고 정상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소폭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황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증가
 - '23년 4분기 이후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며 반도체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향후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
 - 2023년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상반기 내 전방산업 수요 감소 및 IT 업황 회복 둔화가 지속되었던 영향으로 '23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3억 달러를 기록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억\$, \$)

구분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73.7 (-36.2%)	89.0 (-27.9%)	74.4 (-33.6%)	85.6 (-20.6%)	99.4 (-13.5%)	89.4 (-3.1%)	95.2 (12.7%)	110.3 (21.7%)
D램 고정가격	1.40	1.36	1.34	1.30	1.30	1.50	1.55	1.65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3.82	3.82	3.82	3.82	3.82	3.88	4.09	4.3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3.10.01)'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우리나라의 2023년 11월 반도체 생산 및 12월 반도체 수출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회복세
 - **(생산지수)** 2023년 11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9%, 전년동월대비 26.8% 증가한 131.1로, 2023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회복세를 지속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10.1%, 전년동월대비 45.9% 상승한 154.2로 반도체 제조 시황이 빠르게 회복

5)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2월 수출입 동향(2024.01.01)'.

- **(품목별 수출액)** 반도체 디바이스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의 수출 실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총수출액은 '23년 1월 저점을 찍은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2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8.4%,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한 약 879.6천만 달러 수준
 -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23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각각 전월대비 13.8%, 33.1% 감소하며 반도체 부문 수출 회복세에 악영향
 - '23년 12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모바일 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6.0%, 18.4% 크게 증가하며, 총수출액의 회복을 견인
- **(인천)** 2023년 11월 인천지역의 반도체 관련 생산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12월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세는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개선세
- **(생산지수)** 2023년 11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9% 감소,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153.3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품목별 수출액)** '23년 12월 기준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누계는 전월대비 10.1% 감소,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약 124.5천만 달러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수출액 회복세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1.8% 감소,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14.7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국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으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2.9%,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
 -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2021년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3년 12월에는 전월대비 48.3% 증가한 11,420천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
 -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전월대비 12.6%, 전년동월대비 75.1% 급성장한 72,177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3.08	'23.09	'23.10 (p)	'23.11 (p)	'22.11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21.2	133.8	122.6	131.1	104.3	6.9	26.8
	반도체 제조업	143.0	161.1	140.0	154.2	108.3	10.1	45.9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41.7	155.4	176.1	153.3	137.5	-12.9	11.5

* 자료 :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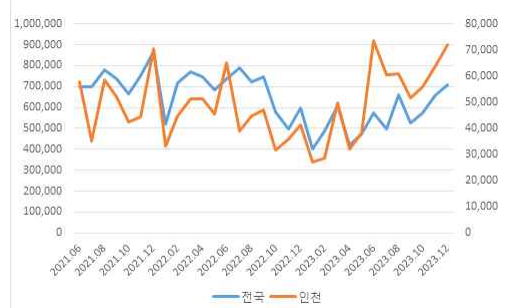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3.12)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12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2,431	-10.9	161,830	6.6	69,399	15,730	13.1	16,671	-2.3	942
자동차	17,649	-2.1	80,165	10.0	62,516	1,251	-16.6	7,282	9.0	6,031
기계장비	55,893	-6.3	74,420	17.0	18,527	5,057	30.9	4,758	-1.5	-299
바이오-의약	7,528	-27.2	6,283	12.3	-1,245	1,587	40.5	3,169	-4.5	1,582
바이오-화장품	1,609	-9.4	6,753	15.7	5,144	24	13.5	1,457	14.3	1,43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교육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27년 35개교로 확대 운영



#교육부

- 정부가 '24년 내 10개교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기반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
 -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협약 연합체는 △학교 비전 △교육 방법 및 계획 △협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기간(3~5년) 동안 해마다 연간 성과를 공개하여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지원을 갱신 또는 종료
 - 교육부는 올해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당 35억~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협약형 고등학교를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
 - '24년의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은 오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후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될 예정

투자

16일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가능



#행정안전부

-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 및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금을 출자 가능
 -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대상 등을 고시하고, 관련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씩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되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민간투자자·지자체 출자 등을 통해 조성되며, 전체 펀드의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

관광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인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최
 -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1,650개 이상의 기업의 참여와 지자체별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K-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
 - 항공과 숙박 분야에서는 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면세점·백화점·대형마트·미용 편집숍 등에서도 전국 주요 지점에서 할인 및 구매금액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항공·숙박·쇼핑·식음·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이 준비
 - 체험 분야에서는 △(음악)댄스·보컬 클래스 △(음식)김밥·치킨소스 만들기 △(문화)전통 다과상 △(미용)메이크업 클래스 등 외국인이 관심있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 한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원도에서는 도내 스키·숙박 할인과 더불어 33개 식음매장 및 39개 GS25 편의점에서 △특정 메뉴 할인 △외국인 인기상품 n+1 △외국인 결제수단 최대 1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
 -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및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

기술 > 과기정통부,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바이오-디지털 기술 융합,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추진
 - 올해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으로 5,42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 신규 R&D과제 중 61개에 대한 1차 공고가 1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

구분	투자 금액	주요 내용
전주기 R&D 지원	1,51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유효물질 도출~임상2상) 및 연구혁신 지원 • (의료기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추진 • (재생의료)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및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연구,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연구 등
디지털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	3,612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뇌연구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및 유전 자치로 원천기술 개발 등 • (연구생태계) 신약개발 연합학습 플랫폼·AI 기반 항체설계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연구 협력	29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적극 지원



상습 물 부족 지역 대상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확대 추진



#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금번 사업은 상수도의 설치가 곤란하여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는 △육지면(육지도) △웅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 10곳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
 - 이에 따라 육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를 진행할 예정
 -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 장기 가뭄대책'과 같은 해 6월 환경부가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제안된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 조사해 향후 지하수저류댐의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



정부, 재정 65%의 상반기 내 신속 집행을 위한 계획 논의



#기획재정부

- 정부가 서민 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약자 복지 및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24년도 재정의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 할 계획
 - 상반기 집행 목표 총액은 중앙재정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로, 특히 '24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투입하는 110조 원을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중 재정 총액의 65~67% 집행하여 민생안정을 지원

중점 관리 대상	예산 규모	주요 내용
약자복지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70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소상공인 융자(고금리 대환대출) 등
일자리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	14.9조 원 (직접일자리 117.7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직접 일자리 97%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 • 청년·고령·장애 등 대상 계층별 맞춤형 지원 • 교육지원사업, 근로여건 개선 사업 확대 등
SOC 사업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24.2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 SOC 투자를 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민간투자 조기 집행 촉진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K-패스의 시행일을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K-패스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
 -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어 매번 출발 및 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K-패스는 이동 거리에 무관한 지출 금액에 따른 환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
 - 또한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기존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 장벽이 낮아졌으며,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의 교통수단에도 K-패스를 이용 가능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거주민의 택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
- 섬 지역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 시, 기본요금 외의 별도의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지불이 필요하여 그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부담
 - 이에 해수부는 '23년 추석기간동안 시행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
 - 금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도서지역 주민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 한해 추가 배송료를 지원
 - 추가 배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추가 배송비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4.01.04.
- 관계부처합동,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2024.01.04.
- 대한민국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11조 5,188억 원 확정”, 2023.12.21.
- 중소벤처기업부, “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및 기자단 신년인사회”, 2024.01.11.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2023.12.
- 파이낸셜뉴스, “인천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24.01.17.
- 인천광역시, 「-대변인·감사관·시민소통·청년정책- 2024년 주요 업무계획」, 2023.12.
- 경기일보, “인천 청년정책 실효성 높여야…인천시의회, 청년공간 활성화 주문”, 2023.11.09.
- 뉴스통신, “‘나사 빠진’ 인천시 청년정책 사실상 ‘답 없네’”, 2023.11.09.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 2024.01.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2024.01.09.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명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2024.01.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관광객 2000만 명 달성 시동”, 2024.01.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원 투입…신규과제 290개 지원”, 2024.0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2024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 원 투자”, 2024.01.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물 부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육지도·덕적도·양동면 등”, 2024.0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약자복지·일자리·SOC사업 속도”, 2024.0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로·철도·공항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역대 가장 높은 수준”, 2024.0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설 전후 40만명 직접일자리 채용”, 2024.01.16.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2024.0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로 앞당겨 시행”, 2024.01.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2024.01.19.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호(2024.01.26)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1월 26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